



진짜 너를 보여줘

지난달 20일 '2019 KUSF U-리그'가 대학농구를 시작으로 약 7개월간의 대장정을 알렸다. 우리학교 농구부는 첫 경기에서 중앙대에 79-74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관련기사 3면)

김혜준 기자 khj_hyejun@khu.ac.kr

총여 폐지 현실로... '성평등위'로 대체

〈총여학생회〉

문하령 기자 moonbyrm@khu.ac.kr

지난달 21일 국제캠퍼스(국제캠) 학생총투표에서 총여학생회(총여) 폐지 안건이 가결되며 우리학교 성평등 자치기구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국제캠 총학생회(총학)는 우선 지난해부터 산하 기구로 임시 운영하던 성평등인권위원회(성평등위)를 유지하되, 향후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제캠 성평등인권위원회 권준은(중국어학 2017) 위원장은 총투표 결과를 두고 “현재 성평등위의 상당수는 총학 임원들이 본인 업무와 성평등위 업무를 겸직 중에 있다”며 “앞으로 성평등위를 총학 산하의 기관으로 두면서, 임원진의 선임 등에서 독자적인 체계를 갖추 수 있도록 형태를 구성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평등위는 일단 총여 복지 사업을 이어받아 운영했던 시험기간 새벽 고양이 버스 운행, 여성용품 지원, 몰래카메라 탐지 및 예방 등을 지속할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하나의 성별에만 치우치지 않고 평등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성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를 심의·의결하는 국제캠 성폭력대책위원회(성폭위) 또한 구성의 변화를 검토 중이다. 성폭위는 관련 규정 상 총여 임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예상보다 길어진 총여의 공백사태로 인해 지난 한 해 동안 성평등위원장이 임시로 기구에 참가해왔다. 국제캠 성평등상담실은 “총여 폐지에 따라 현재 규정을 빠르게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캠의 움직임에 서울캠퍼스(서울캠) 역시 쏠려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분위기다. 서울캠 총학 김수혁(자율전공학 2016) 회장은 “현재 유령 자치기구 재편성 및 의견수렴을 이행하기 위해 상임집행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총여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하고 추후 학생자치기구 개편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캠 총학은 총여 권한대행 인준이 부결된 상태다. 이에 김 회장은 “총학에서 몰래카메라 탐지 및 예방, 자궁경부암 백신 주사 등 총여 일부 사업들을 흡수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가 총여 폐지는 2010년대에

들어 빠르게 진행돼, 올해 1월 연세대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그 기능이 모두 정지 상태에 있다. 현재 우리학교 서울캠, 한양대 총여가 회칙 상으로 남아 있지만 장기간 공석 상태로 실제 활동이 있지는 않다. 젠더사회학자 정교운(사회학) 교수는 “페미니즘 확산에 대한 백래시(backlash), 학생 사회의 붕괴 반영, 새로운 성평등 의제에 따른 변형 등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총여 대체기구 역할은 대학가에서 대부분 유사하게 흘러가는 형국이다. 여학생 복지, 성평등 캠페인 등 총여 복지 사업은 총학이 인계해 지속하고, 성폭력 문제 해결은 학내 인권센터와 연계해 해결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 2018년 총여를 폐지한 동국대는 총학 인권소통국에서 학내 인권센터의 지원을 받아 기존 총여의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동국대 총학 김종현 회장은 “총여의 사업 감사 자료를 참고해 기존 진행했던 사업 일부를 선별해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장 최근에 총여 폐지를 결정한 연세대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권한

대행 체제가 해결되자마자 성폭력 담당위원장 임명 등 구체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연세대 총학 권순주 회장 권한대행은 “차기 총학생회장 당선 후 기구의 개편을 논의하고, 성폭력 사건 발생 시에는 학내 인권센터와 연계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리학교 권 위원장 역시 이 같은 변화상을 두고 “총여 공백으로 인한 성평등위 운영에 어려움이 없었다”며 “학생 또한 그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했고 이러한 점이 투표 결과로 드러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제캠 성평등상담실은 “성평등위가 충분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민한다면 총여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답론 형성 방향이 비판의 테제가 아닌 해결의 테제인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주체로서 많은 활동을 이끄는 사람과 외곽에서 지지를 보내는 사람이 서로 격려하고 존중함으로써 양쪽 모두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성과 연대성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지각’ 걱정으로 얼어붙는 ‘셔틀버스’

김지원 기자 kjw990327@khu.ac.kr

“기사님 죄송하지만 저 여기서 내려주시면 안될까요?” “죄송하지만 정해진 곳에서만 내려드릴 수 있어서요.” 서울캠퍼스(서울캠)와 국제캠퍼스(국제캠)를 잇는 셔틀버스, 일명 설국버스 안에서는 간혹 서로 죄송한 일이 생긴다. 주차장이 된 짙은 도로에서 지각이 염려된 학생이 하차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학교는 국제캠 설립 초기부터 양 캠퍼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했다. 대중교통이 발달한 현재도 통학생, 다전공생, 교직원 편의를 위해 운행을 이어오고 있다. 이는 곧 구성원을 위한 복지다. 이를 방증하듯 셔틀버스 운행 시간과 노선은 학생 수업시간표를 반영하는 등 구성원 필요에 따라 꾸준히 개편되기도 했다.

수원에 거주하며 셔틀버스로 통학하는 손유빈(국어국문학 2018)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는데 지각으로 출결점수가 깎이면 속상하다”며 “시험 날에는 꼭두새벽에 지하철을 탄다”고 말했다. 기사들도 편치만은 않다. 셔틀버스 점검동 기사는 “차가 많을 땐 평소보다 20~30분가량 늦게 도착하기도 한다”며 “학생들이 수업에 늦어 불이익을 받을까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김 기사는 “2년 전에 차가 막히자 한 학생이 몹시 불안해한 적이 있다”며 “그때 임의로 출발시간과 도착시간, 기사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

어줬다”고 이야기했다. 불가피한 지각이었음을 증명해주고자 한 일이었다. 이어 “이후에 양식을 적은 종이 몇 장씩 가지고 다녔다”며 “공식적인 증명서 양식을 만들어 주면 좋을것 같다”고 말했다.

지하철은 공식적으로 지연증명서를 발급한다. 특히 서울캠에 인접한 경의중앙선은 연착이 많기로 악명 높다. 회기역 관계자는 “역사에서 발급받으면 증명서에 본인 이름도 기재할 수 있다”며 “회사나 학교에 제출하기 위해 많이 발급한다”고 말했다.

지연증명서 보다는
운행시간 변경이 더 적함

그러나 셔틀버스 지연증명서 도입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제캠 총무관리처 박수인 과장은 “통학수단은 도보와 노선버스 등 다양하다”며 “특히 셔틀버스와 똑같이 도로상황에 영향을 받는 노선 버스를 고려하면 셔틀버스만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발급 방식에 따라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지연증명서는 학사운영 규정 제12조에 따라 협조전으로 인정받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단순히 지연증명서 발급이 최선은 아닌 것 같다”며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운행시간 변경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더 적합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영국 총장직대 “관리위원회는 필요한 행정지원만 한다”

〈총장후보추천과정관리위원회〉

강석현 기자 nujabes99@khu.ac.kr

총장 선출은 개교 70주년 기념식이 열릴 5월 17일 이전에 치러질 것으로 점쳐져 왔다. 지난해 이미 두 차례나 벌어졌던 ‘결렬 사태’를 딛고 극적인 합의를 이뤄낸 구성원과 법인이었기에 관련 규정 입안과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 구성 등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 예상됐다.

그러나 3월 초 법인이 제시했던 총장후보추천규정(규정) 초안에 담긴 독소 조항과 총장후보추천과정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비롯한 절차적 문제가 지적되면서 새로운 갈등 국면에 접어들었다.

“많은 구성원이 관리위원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 그 역할은 어디까지나 규정에 의거해 총장후보추천과정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달 29일 박영국 총장직무대행(대행)이 관리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직접 입을 열었다.

이날 그는 “지난 2월 25일 법인으로부터 받은 공문에 근거해 대학본부에 규정 초안에 대한 구성

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해당 공문에는 법인이 대학본부 측에 구성원과의 소통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또 “현재 관리위원회가 발족되어 구성원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졌으나 사실이 아니며,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달 8일 열린 대학평의원회(대평의)는 관리위원회를 성도하는 자리였다. 이호창 서울부총장은 “법인이 지난 2월 12일 대학에 총장후보추천에 대한 전 과정 관리를 대학에 위임한다는 결정을 했다”

며 “이에 학교는 그 요청 사항과 의결 결과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성원들이 규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면 오는 22일까지 법인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평의 위원들은 이 부총장을 향해 “관리위원회가 참견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한 대평의 의원은 “왜 법인 측 권한 위임을 거절하지 않았느냐”며 “마치 대학 본부가 우리 구성원 단체들을 관리하려 드는 것 같다”는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 대행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구성원들이 전달 받은 바와는 달리 관리위원회는 법인으로부터 아직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지 않았다”며 “지난 2월 12일 열린 이사회에선 대학본부의 행정 지원 권한에 대해, 의결이 아니라 논의가 이뤄졌던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서 “현재 관리위원회를 어떻게 꾸릴지 논의 중에 있고 아직 정식으로 발족하지도 임시로 구성되지도 않았다”며 “관리위원회라는 명칭 또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박 대행은 ‘대학본부는 총장 선출제와 관련한 논의 주체가 아니’

라는 구성원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교수회의는 지난달 18일 “총장 선출제와 관련해 법인과 협의해 온 주체는 대평의이지 대학본부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도 “법인은 규정 초안 공개 이후 공식적인 대화에 임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보여준 법인의 의지는 온데간데 없고 대학본부 뒤에 숨어버린 독선적인 법인만이 남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3면으로 이어짐